‘李 찐친’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코스피 5000’ 시험대

권역별 업무보고 첫 행보
‘금융위와 협력’ 초반평가의 관건
시민사회 출신 경험 부족 우려도
홍콩ELS, LTV담합 등 방향성 주목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법률 조력자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찬진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하며, 금융권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의 '찐친'으로 여겨질 정도로 두터운 신뢰를 받는 만큼, 정권 초대 금융감독 수장으로서의 상징성과 존재감은 단숨에 부각됐다. 하지만 실무 경험이 부족한 시민사회 출신이라는 배경 탓에, 과연 정책 리더십과 시장 조율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 원장은 18일 권역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행보에 들어갔고, 조만간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과 회동도 예정돼 있다. 정권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위원회와의 협력 관계를 얼마나 매끄럽게 정립하느냐도 초반 평가의 관건이다. 전임 이복현 원장 시절 불거졌던 금감원-금융위 간 엇박자 재연을 막기 위해 양측 모두 '원팀' 기조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새 리더십 아래 금감원이 맞닥뜨린 핵심 과제는 단연 이재명 정부의 금융 비전인 '코스피5000 시대' 실현 기반 조성이다. 단순한 지수 목표가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혁, 불공정거래 척결,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등 근본적 체질 개선이 전제된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를 강조해온 인물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상장사 회계감리, 공시제도 개편, 기업공개(IPO) 심사 등 주요 자본시장 기능에 금감원의 감독 잣대가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경영 감시에 방점이 찍히는 구조다.

이 같은 자본시장 정상화 흐름과 맞물려, 금융사에 대한 감독력도 다시 정비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현안이 홍콩ELS 사태다. 16조원대 손실 우려가 현실화된 가운데 일부 은행들은 수조 원대 과징금을 앞두고 있다. 전임 이복현 원장은 자율배상 유도를 통해 감경의 길을 열어줬지만, 이 원장이 이 기조를 유지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장에선 시민단체 경력과 대통령 신임을 모두 갖춘 이 원장이 '원칙적 판단'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무겁게 보고 있다.

이어 LTV 담합 의혹도 이 원장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설정을 담합으로 간주하며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입장이 주목된다. 이 원장은 취임 첫날 "금융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과격한 액션은 없을 것"이라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시장은 그가 어떤 방향성을 내놓을지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밖에도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책임경영 강화 역시 이 원장의 과제로 주어졌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금융지주·은행 대상 '책무구조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제재 수위와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사고 발생 시 CEO 등 임원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는 정권 차원의 공약이기도 하다. 보안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사기계좌 동결 등 민생금융 범죄 대응도 제도화가 예상된다.

금융권에선 이 원장이 전임자처럼 활발한 언론 소통을 택하진 않겠지만, 오히려 정책 강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워낙 단단한 만큼, 메시지 하나하나가 시장과 금융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며 "침묵이 오히려 더 강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은행·증권주 ‘주춤’… “당분간 변동성 장세”

상반기 최대 실적에 정부 압박
세제개편 등 불확실성 더해져
내달 ‘대주주 기준’ 결론날 듯

여의도 금융가 빌딩 전경. /뉴시스

질주하던 두 마차(금융지주(은행), 증권) 주가가 멈칫하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 탓이다. 정부가 7월 말 발표한 세제개편안 후폭풍이 스무날 가까이 계속되고 있지만 당·정·대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금융의 목표주가는 15만에서 15만5000원(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까지 뛰었다.

신한지주의 목표주가도 10만원(NH투자증권)으로 상향됐다. 우리금융과 하나금융도 목표주가가 각각 3만1000원(유안타증권), 12만원(키움증권)으로 상향됐다.

금융지주의 목표주가 상향 배경에는 실적이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0조3254억원으로 1년 전(9조3456억원)보다 10.5%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9조9380억원)를 넘어선 데다 반기 성적표 기준 역대 최대다.

여기에 자기자본이익률(ROE) 회복과 보통주자본비율(CET1) 안정성, 자기주식 매입 확대 가능성 등도 장밋빛 전망을 낳고 있다.

하지만 상승세를 타던 주가는 최근 주춤한다. 올해 상반기 최대 실적을 낸 금융사에 대한 정부 압박이 커질 것이란 전망에, 세제 개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다.

지난달 25일 12만7000원까지 치솟았던 KB금융은 이날 종가 기준 10만7200원으로 주저앉았다. 신한지주도 지난달 25일 52주 최고가인 7만3500원을 찍은 후 6만7500원까지 떨어졌다. 하나금융지주도 지난달 9일 9만7300원까지 치솟았으며 52주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8만2800원으로 하락했다. 우리금융지주도 7월 2만7150원을 찍은 후 2만47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장 중 변동성도 커졌다.

신영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등 증권주도 변동성이 커졌다. 오락가락 당·정의 행보 때문이다.

당분간 금융주와 증권주의 변동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세제개편안은 의견 수렴 후 8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부는 1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뾰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논란의 대주주 기준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8월 1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실무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지나는 때"라며 "9월 세 번째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또 한 번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15% 룰’ 넥스트레이드, 79개 종목 거래중단

1차 26종목 20일부터 거래 불가
2차 53종목 9월1일부터 한달간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15%룰'이 발동됐다.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에서 총 79개 종목이 한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된다.

18일 넥스트레이드는 공지사항을 통해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의 거래량 기준을 넘지 않도록 시장의 거래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일부 종목을 매매 체결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알렸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대체 거래소의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를 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먼저 1차 제외 종목은 총 26종목으로,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불가능하다. 2차 제외 종목은 총 53종목이며,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넥스트레이드에서 제외된다.

넥스트레이드는 향후 거래 상황에 따라 제외되는 종목이 추가되거나, 제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넥스트레이드의 성장이 현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 사이에서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거래소 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이 방증됐고, 시장 수요를 감안해서라도 장기적으로 현행 '15% 룰'을 20~25%까지 확대하는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godhe@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민간자본 공급

금투협, 회계처리 ‘FV-OCI’ 인정
불확실성 해소… 사업집행 속도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의 회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초장기 인프라 사업에 대한 민간 자금 공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는 회계기준원으로부터 만기를 정하지 않은 폐쇄형 펀드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처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회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펀드를 통해 장기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경우 평가손익이 매년 당기손익(FV-PL)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부담이 제약 요소로 작용해왔다. 실제 인프라펀드 결성 건수 기준 상위 6개 운용사를 집계한 결과, 2020년 2조1000억원에 달했던 인프라펀드 규모는 2024년 6000억원으로 줄었으며, 보험업권은 올해 들어 신규 투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협은 회계 처리 방식이 FV-OCI로 인정됨에 따라 인프라 투자 구조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올해 기획재정부가 18조5000억원 이상 규모로 발굴 예정인 환경·도로·철도 등 신규 인프라 사업에서 민간 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업들의 집행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지역소멸 방지 및 균형 발전 등 새로운 유형의 공모형 민간투자 사업에서도 금융회사의 참여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정윤 기자

KCGI운용, 공모펀드 순자산 2배 ‘껑충’

사명변경 2년만에 111% 증가
사모펀드 시장진출 속도 내기로

KCGI자산운용이 사명 변경 2년 만에 공모펀드 부문에서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업계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며 주식형 펀드가 성장을 주도했다. 회사는 2주년을 계기로 채권·대체자산 운용 역량 강화와 사모펀드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18일 KCGI자산운용에 따르면 공모 주식형·혼합형 펀드 순자산은 2년 전 9206억원에서 1조9468억원으로 늘어나 111%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업계 동일 유형 평균 증가율인 67%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사모펀드를 제외한 전체 공모펀드 순자산도 1조7255억원에서 2조9548억원으로 71%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KCGI코리아펀드가 2년간 4200억원 증가하며 순자산 7022억원을 기록했고, KCGI코리아목표전환채권혼합펀드(2720억원), KCGI초단기우량채(2024억원) 등도 2000억원 이상 늘어나며 외형 확대를 이끌었다.

회사는 2주년을 맞아 장기 성장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동안 주식형 펀드에 집중해온 운용 역량을 토대로 채권형, 글로벌, 대체자산 등으로 사업을 넓히고 사모펀드 시장에도 적극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초 대체운용본부를 확대·재편했고, 지난 7월에는 채권운용팀을 채권운용본부로 격상해 인력을 충원했다. /허정윤 기자